

물가안정 속 갈라진 경기 해석… ‘美 반등’ ‘中 정체’ ‘日 기대’

3국, 같은 흐름 다른 성장 경로

美, 금리 인하 속 주택 반등세 뚜렷
中, 내수 부진·부동산 침체 발목
日, 완화 기대로 자산가치 급등

미국·중국·일본, 세 나라 모두 물가 압력이 꺾였지만 경기·정책의 조합은 뚜렷이 달라졌다. 미국은 물가 둔화 속 주택이 살아나고, 중국은 주택 가격 하락이 내수를 묶고 수출 개선이 일부 완충한 흐름이다. 일본은 실물 경제 둔화에도 정책 기대가 자산가치를 끌어 올린다.

◆美, 물가 둔화에 주택 반등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0%, 근원 3.0%로 예상(3.1%)을 하회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가 1.5%로 오름폭이 확대된 반면 식품·상품·서비스 상승세는 축소됐다. 슈퍼코어(주거 제외 서비스 물가)는 0.33%→0.35%로 소폭 상승했다.

근원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는 2.9%로 8~9월 연속 동일(월중 상승률 0.2%)해 완만한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를 시사한다.

금융여건과 실물의 연결도 나타난다. 30년 모기지금리는 9월말 6.30%로 내려



(왼쪽부터)판공성 중국인민은행 총재,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한국은행

섰다. 8월 신규주택판매는 전년 동월비 15.4% 증가한 총 80만호로 거래가 살아났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기존주택판매(+1.8%)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책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9월 정책금리 25bp 인하(4.00~4.25%)와 함께 ‘지표 의존’ 접근을 재확인했다. 경제전망(SEP)에서는 2025~2027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했고 정책금리 경로는 하향조정했다. 연준

은 노동시장 둔화 우려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으나 향후 정책 경로에 있어서는 기존의 신중한 접근방식을 유지한다는 기조다.

◆中, 내수·주택 제동, 수출은 버팀목

중국의 10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는 49.0으로 전월 49.8에서 추가 둔화해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를 이어갔다. 비제조업은 50.1, 종합 PMI는 50.0으로 간신히 포함권을 지켰다. 세부 지표도 생산 49.7, 신규주문 48.8, 고용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9월 17일(현지 시간) 워싱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청사에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48.3으로 내수 수요·고용의 힘이 약했다. 물가 측면에선 9월 CPI가 -0.3%, 생산자물가(PPI)는 -2.3%로 약세가 지속됐다. 주택은 9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0.3%) 대비 -0.4%로 하락폭이 커졌다. 가격 하락 도시 수가 57→60개로 늘어 회복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대외 부문은 개선됐다. 9월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호조세를 이어가 (8월 4.1%→9월 8.3%) 증가세가 확대됐다.

주요국별로는 미국 수출 부진이 지속됐고, 유럽연합(EU)·아세안·대만 등은 양호했다. 수입은 철광석·농산물·의약품 등이 증가 전환해 (8월 1.2%→9월 7.4%) 반등했다.

◆日, ‘정책 기대’가 자산 견인

일본의 8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1.5%로 감소했다. 실업률은 2.6%로 높아졌고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은 1.20 수준으로 낮아져 실물·고용 약화가 나타났다.

실질임금도 -1.7%로 하락이 이어져 소비의 복원력을 제약했다. 물가는 9월 코어 2%대 후반으로 오름폭이 재확대됐는데 재화 중심의 상승이 눈에 띈다.

그럼에도 금융시장은 ‘정책 기대’에 강하게 반응했다.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확대·완화적 통화 시사가 겹치면서 닛케이 지수는 10월 중 사상 최고치(10월 27일 기준 5만512엔)를 경신했고, 장기금리(국채 10년)는 1.68% 부근으로 상승했다.

엔·달러는 150엔대 후반의 엔저 구간으로 재진입했다. 이른바 ‘다카이치 트레이드’(재정확대+완화 기대에 베팅한 일본 자산 선호)가 주식·채권·환율을 동시에 움직인 형국이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국민연금 ‘불장 특수’에 200조 수익… 지속가능성 논란은 여전

5년 평균 수익률 8.13% 기록
수익률 6.5%면 고갈 2090년
여야, 수익률 가정 두고 공방

국민연금공단이 올해에 200조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벌어들인 가운데 연기금 운용 수익률을 연 6.5% 이상으로 끌어 올리면 기금 고갈을 209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과거의 연기금 운용 성과를 고려한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지만, 향후 정책 수립에 더 높은 수익률 전망치를 활용할 지에 대해선 정치권의 견해가 엇갈린다.

5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연기금의 연평균 운용 수익률은 8.13%다. 국민연금제도가 출범한 1988년부터 2024년까지의 전체 수익률 평균인

연 6.82%보다 높았고, 연금공단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국민연금기금 재정 전망 추이에 사용하는 수익률 가정치인 연 4.5%보다도 3%포인트(p) 이상 높다.

국민연금은 올해 1~8월에 약 100조 6000억원을 운용 수익으로 벌어들였다. 지난해 말 연기금 적립액인 1212조원의 약 8.3%에 해당한다. 연금공단의 수익률 공시에는 두달 여의 시간차가 존재하는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올해 국민연금의 누적 운용 수익이 지난달 말까지 지속된 국내 증권시장 호조에 힘입어 이미 200조원을 넘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전 세대가 납부한 연금액으로 은퇴 이후 세대에 연금을 지급한다.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연기금에 적립되며, 연금공단은 해당 적립액을 운용해 적립금 규모를 늘린다.

연기금 적립액은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출범 이후 꾸준히 증가했지만, 전체 세대 가운데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적자 전환을 앞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점을 오는 2041년으로 전망한다.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으로 내다봤다. 수익률은 보건부의 제5차 재정추계와 동일한 4.5%로 가정했다. 다만 예정치는 수익률을 연 5.5%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이 2055년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 6.5% 수준까지 끌어 올리면 적자 전환이 2070년까지 늦춰지고, 기금 소진 시점도 2090년까지 밀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기금의 운용 수익률을 높이면 소진

을 늦출 수 있다는 분석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연 평균 수익률을 5.5%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가 포함됐다. 올해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 전망에서도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5.5%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글로벌 공적연금·국부펀드 분석 기관인 SWF에 따르면 지난 2015~2024년 기준 전 세계 22개 주요국의 공적연금 평균 수익률은 연 6.9%다. 국회예정처가 고위 추계에서 가정한 연 6.5%의 수익률은 충분히 지속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향후 국민연금 관련 정책 설정에서 더 높은 수익률 가정치를 활용할 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운용 수익은 전적으로 투자

에 의존하는 만큼, 미래의 불확실성이 존재해서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IMF, 금융대란 등을 거친 지난 37년간의 평균 수익률을 적용해도 기금소진시점이 연장된 만큼, 기금운용 개선 등 노력을 통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연금 전망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수익성을 조화롭게 추구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날 김미에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은 경제 성장기를 벗어났고, 과거와 같은 잣대로 미래의 수익률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보다 엄격하게 분석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게 국가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농협-홈플러스 한지붕론… 송미령 “여건 녹록지 않아”

정부, 인수 타당성 검토 중
농가 피해 우려에 속도 조절

농협중앙회의홈플러스인수론이 재차 불거진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토 중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며, 좀더 신중히 지켜봐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장관은 5일 세종청사에서 언론설명회를 갖고 “이(홈플러스 인수)것이 우리 농업 부문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볼 대목이 있어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수전 참여 여부와 관련해 “농협도 적자가 심한 상태”라며 “실제 검토를 하

고는 있지만 녹록지 않은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면밀히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농가들이 피해 입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 피해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또 “농협은 국내산 농산물 밖에 팔고 있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그런 구분 없이 유통했다”라는 점도 언급했다.

농협의 인수전 참여론은 지난달 국정감사를 거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의도 국감장에서 농림축산식품위 소속 의원들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해야 농산물 유통망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인수전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강호동 농협회장

은 “내부 검토는 없지만 한번 보겠다”고만 답변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후보 2곳은 자금력이나 실제 인수의지 측면에서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송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해 농업 부문의 추가 개방은 방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비관세장벽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협력과 소통 강화가 핵심”이라며 “US(미국)데스크라는 형태의 (양국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창구를 두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구기관 중심 R&D, 산업현장 실증형 전환

≫ 1면 ‘양자기술 산업화…’서 계속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과 KIAT, KEIT, KOTRA, KTL 등 지원기관이 협력 주체로 참여한다.

이들은 산업별 Use-Case 발굴, 표준화 및 규제 개선,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자기술의 산업화와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기관 중심이던 R&D 체계를 기업 중심의 산업 적용으로 전환해,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것이 목표다.

산업부는 이번 출범식에서 양자산업 산업화를 위한 핵심 청사진인 ‘양자기술 산업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초전도 QPU(Quantum Processing Unit) 패키징, 극저온 냉각기 등 핵심 소부장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하고, 산업현장의 난제 해결을 위한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검증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양자·슈퍼컴퓨팅 결합형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직접 양자모델을 설계·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